

AMNESTY
INTERNATIONAL



200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09

09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 개발계획에 의해 강제철거 위기에 처해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CONTENTS

인사말

03 Chair's Report 이사장 인사말

인권보고서

05 Director's Report 사무국장 인사말

08 Foreword 국제인권보고서

20 ROK Report 대한민국 보고서

22 DPRK Report 북한 보고서

활동보고서

26 UDHR 60 세계인권선언 60주년

28 Campaigns 주요캠페인

34 Media Work 미디어활동

36 Education 인권교육

37 Activism 액티비즘

38 Growth 성장

39 Finalcial Report 재정보고

우리가 아직 싸우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다

고은태 이사장



작년 연례보고서의 인사말을 쓴지 일 년,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사회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뒤돌아 볼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를 둘러싼 변화의 방향은 긍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있었고, 온-오프라인 양쪽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았습니다. 연이

어,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언론의 자유까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에는 용산참사가 있었고 경제위기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시민들의 커다란 요구와 열망 속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역량으로 쏟아지는 기대와 격려에 조금이라도 답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지만,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룬 것 보다는 이루지 못한 것이 훨씬 더 크다는 자책이 앞섭니다. 지금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는 역사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원과 관심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의 연례보고서가 보여주는 전 세계의 인권상황 역시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8년 일 년간의 앰네스티의 조사활동을 요약한 것으로써, 전 세계 인류의 인권침해를 모아놓은 수치스러운 자료이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도전과 파괴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기록된 인권침해 사례들은 앰네스티와 전 세계 인권활동가들이 피와 땀으로 하나 하나 써 내려간 헌신의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이 연례보고서는 도처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전 세계에서 인권침해에 대항해 싸우고 있는 현장의 인권활동가들에게 깊은 존경과 연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스리랑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용산에 이르기까지 인권보호를 위한 싸움의 최일선을 이루는 곳곳에서 위협과 공격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를 던져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이들이야말로 인류가족의 선봉이자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앰네스티는 이 분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조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연례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일 년간의 인권침해를 돌이켜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빈곤이 인간의 존엄성을 대량으로 그리고 참혹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의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분명한 것은 굶주림과 폭식으로 양분된 우리 세계-소수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를 황폐화시키는-가 깊은 구렁이로

**Chair's
Report**
이사장 인사말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 위기는 빈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조건을 파괴하고 인간을 비인도적인 상황에 몰아넣으며 존엄성을 박탈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빈곤은 결코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앰네스티가 빈곤에 의해 초래되고 빈곤을 구조화시키는 인권침해에 대해 싸워나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경제위기는 빈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조건을 파괴하고 인간을 비인도적인 상황에 몰아넣으며 존엄성을 박탈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빈곤은 결코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빈곤은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차별적 재난이자 수많은 인권침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어떤 대량파괴무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안전, 부정의, 존엄의 상실은 빈곤이 우리가 대항해야 할 인권의 문제임을 증명합니다. 지난 반세기, '양심의 수인'들을 위해 활동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 낸 것처럼, 이제 우리는 '빈곤의 수인'들을 위해서도 그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또한 세계는 각지에서 벌어지는 분쟁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조차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마찬가지로 가자지구에서 다르푸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조건을 송두리째 파괴당하고 낭떠러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빈곤이든 분쟁이든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안전과 존엄성이며, 이것은 인권을 보장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현재의 정부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안전보다 체제의 안전을 앞세우고 사람들의 생계보다는 거대한 경제주체들의 이익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과 존엄성을 위한 시민들의 저항에 폭력을 앞세운 억압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할 때, 그 미래는 쉽게 상상 가능한 것입니다.

올해 초에 쓴 신년인사에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인권을 위해 투자할 때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온통 들려오는 절망의 소식 속에서 희망의 증거들도 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지부는 회원 수 10,000명을 넘어서 커다란 목소리를 가진 인권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성장은 우리의 시민들이 좌절하지 않았고, 인권을 위한 싸움에 힘을 합치기로 결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어두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아직 싸우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의 포기만이 우리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인권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 깃들어 있는 모든 권리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세상'. 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야말로 국제앰네스티 수백만 회원 모두가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이 꿈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인권을 위한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야말로 인류 전체를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투자입니다. 우리 모두의 싸움에 더욱 힘을 모아주시고, 당신의 참여가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위한 도전

김희진 사무국장



2008년,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전세계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기를 바랬습니다. 여러 곳에서 축하의 행사가 진행되었지만 사실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일 보다 반성할 일과 다짐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인권은 강대국들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를 위한다며 인권을 포기했

습니다. 아시아에서는 'Asian Value' 라는 문화적 개념을 들며 인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9/11 테러로 인해 '서양' 과 '비서양' 은 더욱 멀어져 갔고 이는 의심과 공포, 차별과 편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이유로 시민들의 자유를 제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물론 한국도 함께했습니다. 새 정부는 여러 가지 공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찰의 무력진압을 통한 공포, 정부를 비난하는 이들과 인권활동가들의 탄압을 통한 공포,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공포를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의 폭력성을 부추겼고 불법체류자가 사회안정에 해가 된다면 이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켰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경제의 세계화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왔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빈곤을 뿌리뽑고 세계의 지도자들이 약속했지만, 빈곤은 더 심해졌고 빈곤에 처한 이들의 인권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인권을 탄압했던 정부들은 이제 경제위기를 이유로 공포를 조성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세계지도자들이 60년 전 세계인권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보여줬듯이 현재의 세계지도자들이 공통된 비전을 가지길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한 해를 마감했고 '살인자를 죽이라' 는 구호를 들으며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폭력적이고 잔인해져 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세상을 바꿔주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시민들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탄압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시민들과 함께 했으며 시민들의 힘에 의해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앰네스티가 이제 1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대변하며 활동한 회원들, 조금은 부끄럽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가능한 일을 한 회원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활동한 회원들, 즐기며 활동한 회원들, 서로 함께하여 더욱 힘이 되었던 회원들, 그리고 최선을 다해준 사무국원들, 이들이 함께 움직인다면, 다른 지역의 220만 명의 회원들과 함께 움직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지부는 눈을 크게 떠 인권가해자를 바라보고, 귀를 쫑긋 세워 인권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목소리 높여 이것들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특별한 변화는 계속 됩니다.

Director's Report

사무국장 인사말

점점 폭력적이고 잔인해져 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세상을 바꿔주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시민들이 될 것입니다.

인권 보고서

미얀마에서 야자나무잎과 비닐로 만든 임시 보호소에서 살고 있는 가족 - 사이클론에 의해 자신들의 집은 파괴되었다.

© UNHCR



경제의 몰락, 사라진 인권

아이린 칸 Irene Khan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Foreword

국제인권보고서



런던의 이란 대사관 앞에서
아동의 사형집행을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 Amnesty International

2008년 9월에 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관한 유엔고위급회담 참석차 뉴욕에 있었다. 빈곤 경감을 위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한 목표(MDGs)에 관한 이 회담에서 정부 대표들은 연이어 예방 가능한 기아 근절, 유아와 임산부의 사망률 감소,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 제공,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수 십억 명의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성이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돈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미약하기만 했다. 유엔 건물에서 나오는 길에 나는 뉴욕 맨하탄의 또 다른 모습인 증권시세표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월 스트리트의 가장 큰 투자은행 중 하나가 파산 후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최고의 금융위기는 세계의 관심과 자원이 여태까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지표였다. 강하고 부유한 국가들은 빈곤 근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없었던 돈을 그 금액의 몇 배나 갑자기 마련해내고 있었다. 강하고 부유한 국가들은 망해가는 은행들에, 또 몇 년간 오르락내리락하다 좌초하고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그 돈을 평평 쏟아 부었다.

2008년 말, 우리는 세계가 굶주림과 폭식으로 양분되고-소수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수를 황폐화시키고 있는-깊은 구렁이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기후 변화의 문제도, 세계 경제 침체의 문제도 책임의 대부분이 부유한 이들에게 있지만, 그 최악의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이다. 경기침체의 충격에서 예외는 없겠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겪는 재앙은 가난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중국의 이주노동자들부터 콩고민주공화국 카탕가(Katanga)지역의 광부까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의 칼끝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난 해 식량 위기로 타격을 받은 1억 5천만 명에 더해, 세계은행은 올해에도 5,300만 명이 추가적으로 빈곤에 빠져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지난 십 년간의 개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800만 명에서 5,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통계를 제시하고 있

다. 치솟는 식량가격은 더 많은 굶주림과 질병, 강제퇴거로 이어지며 결국 더 많은 노숙자와 빈곤을 야기시킬 것이다.

최근 몇 년간의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에 너무 이르기는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 위기의 결과와 인권분야에 있어서 치러야 할 비용이 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정부들이 시장경제에 맡기며 경제와 금융규제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권과 사람들의 삶, 생활을 보호하는 데에도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의, 존엄성의 상실로 고통 받고 있다. 인권의 위기에 처해졌다.

이 위기는 식량, 일자리, 안전한 식수, 땅과 주거 부족의 위기이다. 또 이 위기는 커져가는 불평등과 불안,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 폭력과 억압에 관한 것이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한데 모여 세계적인 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세계적인 위기는 세계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하며, 이는 국제적인 협력과 인권과 법치에서 찾을 수 있다. 불행히도 강대국들은 자국의 금융 경제 위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더 심각한 세계적 위기는 무시하고 있다. 혹여 강대국들이 국제적인 행동에 나서려 한다 해도, 이는 금융과 경제에만 국한될 뿐, 과거의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다.

세계는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다른 종류의 정치를, 다른 종류의 경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대책을 말이다. 우리에게 자국 문제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들을 다자적인 협력의 자리로 이끌어 낼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만 총괄적·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해결책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외된 이들을 희생시켜 경제적인 풍요를 얻으려는 이기심 위에 구축된 정부들과 기업간의 동맹은 해체되어야 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를 그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편리한 동맹들'도 사라져야만 한다.

다양한 측면의 불평등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내버려졌다. 그 동안의 경제 성장으로 쌓아왔던 것들은-최근의 경제 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너무나 무너지기 쉬운 것이었고, 개인의 인권이 치러야 할 비용은 너무 컸다. 통제되지 않는 세계화의 불가항력은 최근 수년간 세계를 성장의 광란으로 몰아 넣으면서, 인권은 너무나도 자주 뒷자리로 내몰렸다. 결과는 분명하다. 불평등, 박탈, 소외, 불안이 만연해지고 있다.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뻔뻔함과 불처벌에 의해 억압되고 있으며, 정부, 대기업, 국제금융기관들과 같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주체들은 뉘우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국제사회가 해결할 수도, 해결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끔찍한 분쟁들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불안은 더해가고, 정치적 불안과 폭력의 징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터지기 일보직전의 불평등, 불의, 불안의 화약통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세계는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다른 종류의 정치를, 다른 종류의 경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대책을 말이다. 우리에게 자국 문제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국가들을 다자적인 협력의 자리로 이끌어 낼,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세네갈에서 경찰들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 SEYLOU AFP Getty Images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곳에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프리카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층에 남아 있으며,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지역이며, 인상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주민¹⁾과 도시 및 농촌의 소외된 집단의 사람들이 건강권, 식수권, 교육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아시아의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도시 슬럼이나 농촌 지역 소외 집단의 빈곤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에서 지방의 노동자들 및 이주노동자들과 도시의 부유계층 사이의 생활 수준 차이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 인구 중 대다수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으며, 이 중 10억 명 이상은 슬럼에 살고 있다. 즉, 도시 거주민 3명 중 1명은 기본적인 복지가 전혀, 혹은 거의 없는 부적절한 주거 시설에 살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불안, 폭력, 강제퇴거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는 60%에 달하는 인구가 슬럼가에 살고 있으며, 이 중 백만 명이 살고 있는 키베라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슬럼가이다. 또 다른 예로는, 약 15만 명의 캄보디아 사람들이 토지 분쟁과 토지 강탈, 농산업 및 도시 재개발 사업 등의 여파로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의 부산물인 불평등은 개발 도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8년 10월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도 “최근 수십 년 간의 경제 성장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은 빈곤 지속과 소득 불균형도 지표에서 OECD의 30개 국가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리오테자네이로 슬럼가의 도시슬럼에서부터 유럽 사회 곳곳의 집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더러운 진실은, 많은 사람들이 빈곤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기업이나 개인과 결탁한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는 정책의 결과, 즉 공공연하면서도 은밀한 차별, 소외, 배제의 결과라는 것이다.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여성, 이주자, 소수 민족, 또는 종교적 소수자라는 사실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출산 전후의 응급 치료를 위한 최소의 경비만으로도 임신한 여성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산모사망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기업과 국가가 공조해서 사람들의 토지와 천연자원을 빼앗고 파괴화시키는 것의 명백한 예는 선주민 공동체에서 볼 수 있다. 볼리비아 차코 지역의 과라니 선주민 가족들 중 많은 수는 미주인권위원회(IACHR)가 노예제도와 흡사한 속박의 상태라고 묘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유엔 선주민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08년 8월 브라질을 방문한 후, “정책 형성과 공공서비스제공, 법집행의 밀바탕에 선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1) 선주민: 해당지역에 먼저 정착하고 살던 원주민.

불평등은 사법제도에까지 이어진다. 국제금융기관들은 시장경제를 강화하고 외국기업과 개인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영리 부분의 법률적 개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그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나 기업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 빈곤계층 법적권한강화위원회(UN Commission on Legal Empowerment of the Poor)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실질적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여러 형태의 불안

경기침체의 상황에 다른 여러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빈곤과 인권 침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10여 년 전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주도하던 구조조정 정책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제거해버렸다. 구조조정정책은 국가가 시장경제를 지원하고 국제 교역에 국내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었다. 이는 국가들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보장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더 우위에 두는 '작은정부'로의 변화를 이끌었다. 구조조정정책 하에서는 경제부분의 자유화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규제 완화 그리고 사회 안전망의 축소 등이 추진되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교육이나 보건 분야에서는 종종 가난한 사람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기도 했다. 경제상황이 위태롭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수 많은 사람들이 단지 수입의 감소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게 할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사회적 불안에 노출되어있다.

둘째, 세계 식량 위기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거의 10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 실조로 고통 받고 있으며, 식량부족으로 최악의 기아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농업분야에 대한 저조한 투자와 덩핑을 조장하는 무역정책, 그 결과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 기후변화로 인한 식수부족과 토지의 황폐화, 늘어나는 인구와 에너지 비용의 상승 그리고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쇄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많은 지역에서 식량 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식량 배급이 차별과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필수적인 인도적 원조 물품 지원이 차단되기도 했다. 또 불안과 무력분쟁 때문에 사람들은 식량을 구매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없었고, 농작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2008년 말, 짐바브웨에서는 식량 원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5백만 명에 달했으나, 짐바브웨 정부는 식량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했다. 북한의 경우, 당국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압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식량 원조를 제한했다. 수단 정부군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잔자위드 민병대의

‘초토화’ 전술은 다르푸르 주민들의 삶과 생활을 파괴해버렸다. 스리랑카의 북부 지역에서는 분쟁 상황에 갇히게 된 실항민들이 인도적 지원과 식량을 박탈당했다. 반군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은 민간인들이 이 지역을 떠날 수 없도록 막았으며, 스리랑카 정부군 역시 구호단체들의 완전한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2008년, 인간의 식량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사례 중 가장 큰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은 아마도 미얀마 정부가 싸이클론 피해자 240만 명이 절실히 필요로 한 국제원조를 3주간 거부한 것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당시 미얀마 정부는 문제가 있는 헌법개정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강행하기 위해 국가 자원을 전용했던 상황이었다.

식량 가격 상승에 더해, 수출 지향 경제가 쇠퇴하고 경제적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고 당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고국으로 송금하는 돈은 연간 2,000억 달러(이는 전세계 해외개발원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에 달하는데 이것은 방글라데시, 필리핀, 케냐, 멕시코와 같은 저소득국가들의 중요한 수입원이다. 송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소득 국가들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에 쓸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부 국가들에서, 노동력 수출 감소는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이 더욱 환멸을 느끼게 하고 분노하게 하며, 극단적인 정치나 폭력의 손쉬운 희생양으로 만든다.

한편, 노동 시장까지 축소되면서, 이주 압력은 계속해서 늘어나 수용국들은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어느 때 보다 더 엄격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08년 6월, 나는 카나리 군도의 테네리페 공동 묘지를 방문했었다. 그곳의 이름없는 무덤들은 스페인으로 입국을 시도하려던 아프리카 이주자들의 허망한 노력을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다. 2008년 한 해에만 67,000명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는 위험한 시도를 했으며, 도중에 익사한 사람의 숫자는 알 수조차 없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신분 증명서가 없는 어둠의 존재로 착취와 여러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또 이들은 2008년 유럽연합(EU)이 불법 이주자 송환에 관한 지침(EU Directive on Returns of illegal immigrants)을 발표하면서, 장기적인 구금과 그에 따르는 강제출국의 위협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주자들을 돌려보내거나, 애초에 출국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양자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모리타니아 같은 국가들은 이 같은 협정을 마치 자국 영토에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환경에 구금하고, 아무런 법적 구제책도 없이 강제 출국시켜도 된다는 것으로 여긴다. 더구나 이들이 모리타니아를 떠날 의향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모리타니아를 비정기적으로 떠나는 것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008년에 있었던 최악의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따른 폭력 사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했다. 60명이 살해되었고, 600명이 부상하고, 수만 명이 실항

민이 되었다. 더구나 당시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짐바브웨에서의 정치적 폭력과 박탈을 피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입국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폭력의 원인이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외국인 혐오, 그리고 부패로 인해 악화된 일자리, 주거, 사회 서비스에 대한 경쟁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 회복은 정치의 안정화에 달려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앞다투어 구제책을 마련하던 바로 그 세계의 지도자들은 대량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빈곤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세계의 끔찍한 분쟁들은 계속해서 도외시키고 있다.

군사적 공격에 의해 차단되고 난타당한 가자 지구의 경제적 상황은 끔찍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 지구 분쟁의 정치·경제적 결과는 이 지역을 넘어서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다르푸르와 소말리아의 분쟁들은 생태계가 취약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식수와 인구를 부양할 식량 공급능력에 대한 부담은 계속되는 전쟁의 원인인 동시에 그 결과이기도 하다. 분쟁으로 인해 발생된 대량 실향민들은 이제 세계 경제 위기의 부차적 결과까지 극복해야 할 이웃 나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는 탐욕, 부패, 경제적 이해관계가 지역의 권력 정치와 함께 앞다투어 주민들을 피폐하게 하고 끈질긴 폭력의 순환에 빠뜨리고 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진 국가가, 이제는 경제 침체 여파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면서 재건과 재생 노력이 퇴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회적 불안이 만연해지면서 주민들의 식량, 보건, 교육(특히 여성과 소녀들의)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국경을 넘어 이웃국가인 파키스탄에까지 번져가기도 하며, 내부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을 극단주의 폭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미 파키스탄은 인권과 빈곤,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

금융 위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국경선이 우리를 피해로부터 차단시켜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최악의 분쟁과 늘어가는 극단주의적 폭력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권에 대한 더 큰 존중을 택하는 것은 세계 경제 원상회복이라는 큰 그림에서 볼 때도 더욱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경기침체에서 억압으로

우리는 심화되는 빈곤과 절망적인 경제 상황이 정치적 불안과 대규모 폭력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경기침체가 더 큰 억압을 동반하는 상황들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 곤경에 빠진 정부들(특히 권위주의적 경향이 있는 정부들)이 늘 자신들을 향한 반대와 비판 그리고 부패와 경제적 실정에 대한 폭로행위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듯이 말이다.

2008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2009년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치솟는 식량 가격과 절박한 경제 상황에 항의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 많은 정부들이 평화로운 시위조차 강경하게 대응했다. 튀니지에서는 파업과 시위가 무력으로 진압되어 두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 또한, 200명 이상이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되고, 일부는 장기 징역형에 처해졌다. 짐바브웨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들과 인권활동가들 그리고 노동조합 대표들이 정부로부터 공격과 납치 그리고 체포에 시달렸으며, 살해된 경우도 있었으나 책임자들은 처벌 받지 않았다. 카메룬에서는, 폭력시위가 발생한 이후 100여명의 시위자들이 총에 맞아 죽었으며, 그보다 훨씬 많은 수가 투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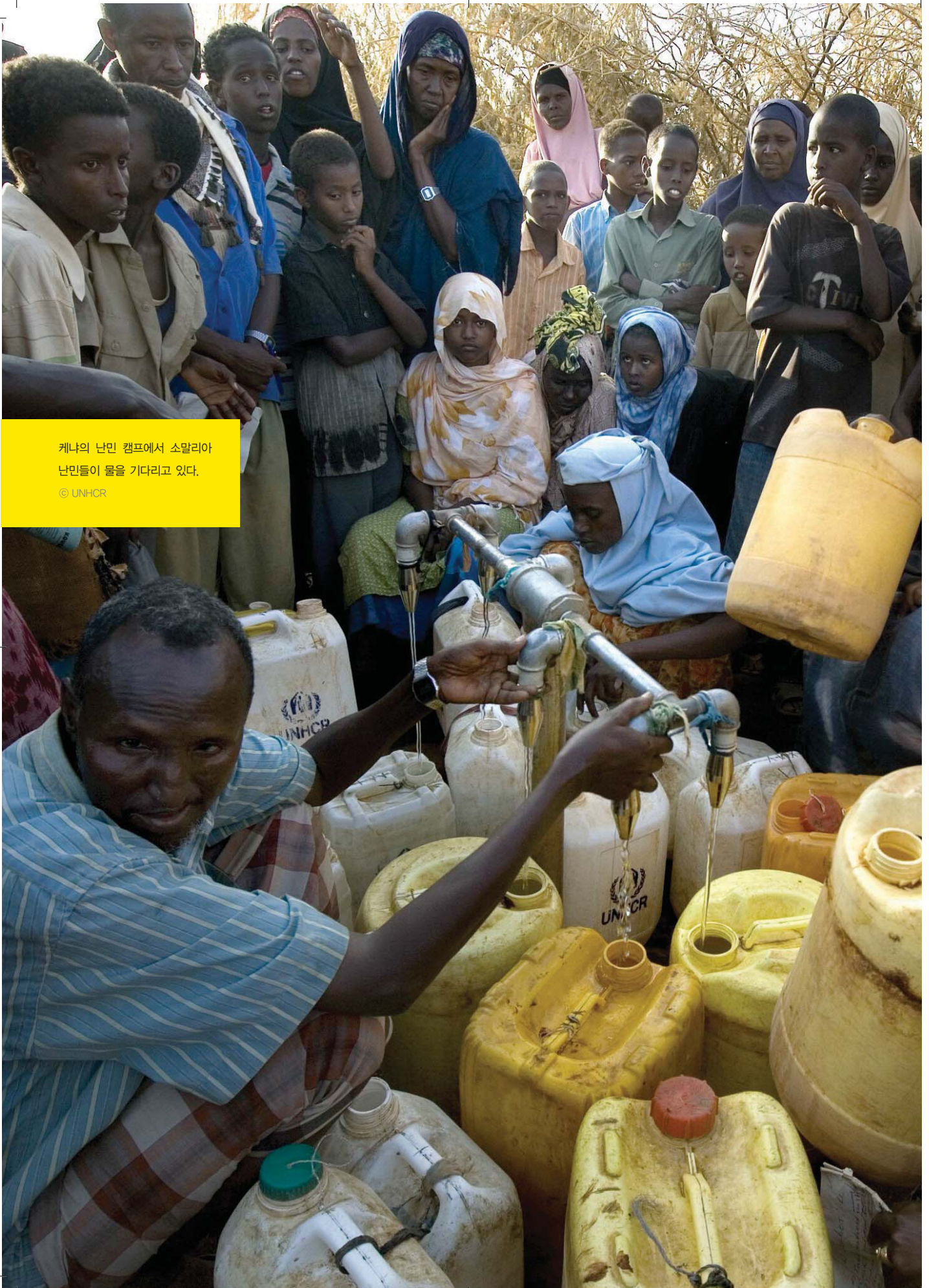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긴장이 존재하는 시기에, 불만과 불평이 건설적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관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히려 많은 나라들에서 시민 사회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인권활동가, 언론인, 변호사, 노동조합 대표, 시민 사회 지도자들은 박해와 협박, 공격을 당하거나 법적 정당성 없이 기소되고 살해되고 있지만 책임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정부들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언론 매체에 대한 검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많은 나라의 언론인들이 이미 직면하고 있는 위협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악의 기록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인 스리랑카에서는, 2006년 이후 14명의 언론인들이 살해당했다. 이란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으며, 이집트와 시리아는 블로거들을 구금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언론 검열을 완화했으나, 곧 웹사이트 차단 등의 검열을 가하던 옛 행태를 다시 보여주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우려하여 정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던 두 개의 유력한 신문을 폐간시켰다.

열린 시장이 꼭 열린 사회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으로 강력한 경제적 권력을 손에 넣어 대담해진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국가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 비판자에 대한 공격을 가해왔다. 하지만 최근 석유 가격 하락과 인플레이션 심화 그리고 사회적 불만의 확산으로 러시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권위주의적 경향이 오히려 더욱 두드러질 수도 있다.

중국은 당국의 정책과 정책 집행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심하게 억압하고 있다. 비판이 억압된 결과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와 기업의 비행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도 제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예로 수년 전 조류 독감의 공포와 HIV/AIDS의 유행 그리고 최근의 멜라민 유제품 파동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큰 피해가 발생했다. 중국은 부패 혐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형하는 정책으로 대응해 왔으나, 중국의 기업 또는 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책임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기만 한다면, 시민사회는 정부와 기업들이 직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케냐의 난민 캠프에서 소말리아
난민들이 물을 기다리고 있다.

© UNHCR

정부들이 경제 부양을 추구하는 현 시기에, 자유는 억압의 대상이 아니라 장려해야 할 자산이다.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

박탈, 불평등, 불의, 불안, 억압은 빈곤의 특징이다. 이것들은 분명 인권 문제이며, 단순히 경제적 조치로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권 문제들은, 강력한 정치적 의지, 그리고 인권과 법의 지배라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통합하는 종합적 대응을 요구한다. 이제 인권 문제들은 집단적 행동과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적 세계화는 지정학적 권력 구도를 변화시켰고, G20의 구도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국가들의 연합이 새로운 세계의 리더십 지위를 자임하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남반구의 신흥 국가들과, 러시아, 미국, 기타 서구 국가들로 구성된 G20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정치적 힘과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G20이 진정한 세계의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세계적 가치에 동의해야 하며, 지난 시절 인권에 있어서의 부끄러운 기록과 이중잣대를 청산해야 한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취임 48시간이 안되어 관타나모 수용소를 1년 안에 폐지하고, 고문에 명백히 반대하고, CIA의 비밀 구금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훌륭한 결정이었다.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참여하려는 결정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아직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스라엘이나 중국과 같은 국가들에게 솔직하고 강력하게(이란이나 수단에게 하듯이)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

유럽연합(EU)의 인권보호 의지는 아직도 양면성을 띄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많은 국가들은 사형, 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들의 보호와 같은 문제들에는 강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난민보호와 인종차별을 포함한 자국 내 차별철폐에 대해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CIA와 결탁하여 '테러용의자들'을 불법적으로 인도했던 사실을 인정하려는 데에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브라질과 멕시코는 국제적으로는 강력한 인권의 지지자이지만, 불행하게도 자신들이 국외에서 주장하던 것을 정작 자국 내에서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정치적 박해와 선거 조작을 끝내라는 국제적 압력으로부터 짐바브웨 정부를 보호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테러 용의자 수천 명을 재판 없이 구금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구금하고, 이주노동자와 여성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형사 사법제도 내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비판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의 행정구금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 최대의 사형집행국이기도 하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북코카서스 지역에서 자의적 구금, 고문과 부당한 대우, 초법적

G20이 진정한 세계의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세계적 가치에 동의해야 하며, 지난 시절 인권에 있어서의 부끄러운 기록과 이중잣대를 청산해야 한다.

처형이 자행되는 것을 묵인했으며 책임자를 처벌하지도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오히려 여기에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위협했다.

G20에 소속된 국가들은 국제 사회가 지키기로 약속했던 국제인권기준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약속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G20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효율성뿐 아니라 자신들의 신뢰성과 합법성마저도 훼손될 것이다. G20의 목표는 세계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노력이 빈곤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제회복이라는 목표 설정 과정에서 인권이 중심에 자리잡지 않는다면 그러한 경제회복은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세계 지도자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G20 회원국들이 모든 인권, 즉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나 시민·정치적 권리가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정당성을 부인해 왔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에 가입하지도 않았다. 반면 중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가입하지 않았다. 두 나라 정부들은 각각의 조약에 즉각 가입해야 할 것이다. G20의 모든 회원국들은 2008년 12월 유엔 총회가 채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의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국제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단지 앞으로 이뤄져야 하는 일들의 첫 단계일 뿐이다.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

경제위기로 더욱 악화된 세계적인 빈곤의 상황은 이제 인권 상황이 변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왔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이와 동시에 경제 위기의 상황은 우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시켰다. 새로운 체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이다.

지난 20년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시장의 이익을 위해 인권 의무들을 뒤로 물리거나 부정해왔다. 하지만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서, 세계의 정부들은 자신들의 입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구조와 국제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지난 20년간의 세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특정 지워졌던 이전의 국가의 역할-사회적 영역을 방치하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여 인권의 보호와, 존중, 실현의 차원에서 국제금융기관들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세계의 정부들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경제 성장에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인권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보건 및 교육의 기회를 확장시키고 지원해야 하며, 차별을 종식

시키고, 여성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들은 기업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보편적인 기준과 효과적인 체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또 법의 지배가 존중 받고, 강한 사회적 연대가 존재하고, 부패가 근절되고, 정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 위기가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원조의 규모를 다시 줄이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의 시기야말로 일부 최빈국들이 보건, 교육, 위생, 주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원조의 중요성이 더 잘 드러난다.

세계의 정부들은 또한 최악의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한가지 위기에 집중하기 위해 존재하는 또 다른 위기를 무시한다면 상호관계로 맺어진 현재의 세계에서는 그들의 상황이 모두 악화될 것이다.

세계의 정부들이 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붙잡을까? 기업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이 그 동안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변화에 나설까? 지금까지 인권은 그간 국제 사회가 겪어온 질병에 대한 진단서나 처방전 속에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다.

역사는 변화를 위한 투쟁들의 대부분이—노예제 폐지나 여성 해방 등— 국가의 주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도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무기거래통제, 사형제도 폐지 여성폭력추방, 전세계 빈곤과 기후변화의 국제 의제화 등에 있어서의 성공은 대부분 전세계의 수많은 활동가들의 힘과, 창의성 그리고 집념 덕분이었다.

이제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힘으로 정치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 이것이 2009년 국제앰네스티가 많은 지역, 국가, 국제적인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출범시키게 되는 이유다. ‘존엄을 요구한다!’ 라는 가치 아래 우리는 빈곤을 심화시키는 인권침해에 대해 각 국가와 국제적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우리는 차별적인 법률, 정책, 관행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빈곤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빈곤 종식을 위한 논의의 중심에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빈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거의 50년간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수 석방을 요구해 왔다. 오늘 우리는 빈곤에 갇힌 수감자들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존엄을 요구’ 한다. 나는 전세계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회원, 지지자, 파트너들의 도움과 지지를 통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ROK Report

대한민국 보고서

남한 (대한민국)

국가 원수 이명박 (2월 노무현에서 교체)

행정부 수반 한승수 (2월 한덕수에서 교체)

사형제도 사실상 사형폐지국

인구 4840만

평균 수명 77.9세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남아/여아)

5/5(1000명 당)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대체로 평화롭게 시위를 하던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진압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많은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출국되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자들, 노동조합원들,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지만, 58명이 여전히 사형 대기 중이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3월에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었다.

과도한 무력사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하는 촛불 시위에 수 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으며, 5월부터 7월 초까지 거의 매일 시위가 열렸다. 대부분의 경우 평화로웠던 시위에서, 일부 경찰이 방패와 곤봉으로 시위자들을 구타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물대포를 발사하고, 구금 중인 시위자들의 의료 조치를 거부했다. 시위자들은 골절, 뇌진탕, 일시적 시력 상실, 고막 파열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주자의 권리

9월, 한국 정부는 2012년까지 비정규 이주노동자의 거의 절반, 약 22만 명을 출국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계속되는 단속을 통해 체포 되는 과정에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당하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11월, 약 280여 명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경찰이 경기도 마석의 공장과 기숙사를 급습했다. 이날 최소 110명의 정규 및 비정규 이주노동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집단 체포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 이주노동자는 화장실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했다. 한 남성 이주노동자는 도망을 치다가 다리가 부러졌지만, 그 후 수갑을 찬 채로 다섯 시간을 기다리고 나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다.

· 5월, 한국 정부는, 체포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한 구타 혐의를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출국을 연기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네팔 국적의 토르나 림부(Torna Limbu), 방글라데시 국적의 압두스 사부르(Abdus Sabur)를 출국시켰다. 이 두 사람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특별히 표적 단속이 되었다는 우려가 있다.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노동 운동 민주노총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작업장에서 비정규직 시위가 일어났다. 당국은 동일 노동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저항하며 파업 중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 제정된 비정규직 법에 의해 (고용 된지)2년 후에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용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다.

언론 독립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광고공사, 아리랑 TV, 스카이라이프, YTN의 최고경영자 및 사장들이 현 정부의 지지자들로 교체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 방송특보였던 구본홍씨의 YTN 신임 사장 임명에 항의하는 시위로 구본홍 사장은 12명의 노조 언론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6명의 언론인을 해고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경찰은 최소 408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병역 의무 거부 혐의로 수감시켰다. 이들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다. 이 숫자는 2007년 733명이 수감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인데, 이는 2009년 대체복무제도 도입 계획을 앞두고 재판진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월 국방부는 여론지지 부족을 이유로 계획을 보류했다.

의경인 이길준씨는 촛불 시위 중 시위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데 반대하여 근무에 복귀하지 않고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자외적 체포와 구금 - 국가보안법

2008년은 국가보안법이 도입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2008년 현재 최소 9명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들로 기소되어 구금 중이다.

8월 26일, 경찰은 대학교수 오세철을 비롯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활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 3조(반국가단체 결성)와 7조(반국가 단체 고무 또는 찬양)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소명부족을 이유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월 14일, 경찰은 오세철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범죄소명부족으로 다시 기각했다.

난민과 비호신청자

2008년 총 364건의 난민 지위 신청이 접수되었다. 36명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22명은 인도주의적 보호 지위를 인정 받았다. 79명의 신청은 거부되었다. 난민 신청 대기 건수가 1,200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력 부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전쟁시의 잔혹행위에 대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국회는 2차 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제도)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 회복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형제도

한국의 비공식적인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은 계속되었다. 2008년 말 기준으로 58명의 사형수가 있다. 3월에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폐기되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1개의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Amnesty International 방문/보고서

• 방문

Amnesty International 대표단이 3월, 7월, 10월, 11월에 한국을 방문하였다.

• 보고서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2008년 8월 25일)

DPRK Report

북한 보고서

북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가 원수 김정일

행정부 수반 김용일

사형제도 존치

인구 2390만

평균 수명 66.8세

5세 이하 영아 사망률(남아/여아)

62/62(1000명 당)

1990년대 말 이후 수백만 명이 최악의 식량 부족에 직면했다. 수 천여 명이 중국 국경을 넘는 일이 계속되었고, 이는 주로 식량과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했다. 체포되어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 고문, 기타 학대를 당했다. 정치적 동기에 의한 자의적인 구금과 사형,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의 심각한 제한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들이 계속되었다. 북한은 여전히 독립적인 인권 감시요원들의 입국을 거부했다.

배경

- 2008년 6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일부로서 중국 외교부에 핵 자산 목록을 제공했다.
- 2008년 10월, 미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에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전면적 접근을 허용하기로 한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 2008년 11월, UN 총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식량권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수백만 명이 십 년간 전대미문의 굶주림을 겪었으며, 그 중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노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 식량 생산은 급감했으며, 식량 수입도 감소했다. 장거리 전화가 차단되기도 했는데, 이는 식량 부족에 대한 소식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8개 도의 53개시, 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전체 북한 가구의 3/4정도에서 식량 섭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가구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가 중단되었고 곡식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양가 없고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야생 식물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었다. 세계식량기구(WFP)와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영양실조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야생 식물 섭취 증가로 인해 발생한 설사였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식량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는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의 식량 확보에 실패했다. 남북한의 경색된 관계 때문에, 북한은 과거 쌀과 비료의 최대 공여자 중 하나였던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주자, 난민과 비호신청자

수천 명이 중국 국경을 넘었다. 이는 주로 식량과 경제적 기회를 찾아서이기도 했지만, 정치적 탄압 때문이기도 했다. 일부는 단기간 머무르면서 식량과 기타 필수품들을 구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나머지의 경우는 대부분 여성이었는데 장기간 머무르다가 중국 농부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일부 브로커들은 북한 여성들의 취약점을 이용해 인신매매하여 강제 결혼시키기도 했다.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 대부분은 체포와 강제송환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며, 그곳에서 강제 노동, 고문이나 기타 학대를 당하게 된다. 수백 명의 북한주민들이 중국을 경유해 제3국 정착을 시도할 수

있는 태국으로 갔다. 대다수는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한국으로 갔지만, 상당수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일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나라, 특히 유럽으로 이주하는 수가 증가했다.

12월 2일, 미얀마 당국은 7살짜리 남자 아이를 비롯한 19명의 북한 주민들의 불법 입국을 위해 태국 국경을 넘으려 시도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미얀마 당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수감 환경

수용소 및 구금 시설의 수감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쉬는 날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벌목, 채석 등의 육체 노동을 강제로 하게 된다. 수용소 경비원들은 수감자들이 거짓말을 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국가의 가사를 잊었다는 등의 이유로 구타했다. 징벌의 형태에는 강제노동,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기, 공개적 비판으로 모욕주기 등이 있다. 수감자들은 구금 중, 혹은 석방 직후에 병이 들거나 사망했다. 이는 고된 강제노동, 불충분한 음식, 구타, 의료 조치 미비, 비위생적인 생활 환경 등의 복합적인 결과이다.

사형제도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교수형 또는 총살의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처형했다. 북한 당국은 정치적, 경제적 범죄를 막기 위해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북한 당국은 불법으로 중국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15명을 공개 처형했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북한은 전세계적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을 촉구하는 UN 총회 결의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강제실종

한국 전쟁 (1950-1953) 이후로 북한에서는 광범위한 강제실종 정책의 관행이 유지되었다. 북한에서 반체제 혐의를 받는 사람의 가족은 '연좌제'에 따라 강제실종되었다. 북한 당국은 지속적으로 강제실종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8월에 북한 당국자들은 1970년대 이후 '실종'된 몇몇 일본인들의 생사여부와 소재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했다.

표현의 자유

북한 정부는 미디어를 엄격하게 통제했으며, 종교 활동을 심하게 제한했다. 북한의 지역 당국은 한국의 영상물을 보았거나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이동 전화를 보유한 사람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찰

북한 정부는 독립적인 인권감시요원들의 입국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12월, UN 총회는 북한이 UN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 인정을 거부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6월 20일 세계난민의 날 캠페인에서 앰네스티 회원들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Broken Promises

지켜지지 않은 약속

UDHR 60

세계인권선언 60주년

60 YEAR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시민여권

60 YEAR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YOURS TO ENJOY - YOURS TO PROTECT

세계시민여권



엘레노어 루즈벨트 여사가 세계인권선언문을 펼쳐보고 있다 © UN Photo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지도자들은 만장일치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고,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은 약속을 되새기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다짐을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08년 한 해 동안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08년 8월 9일 SK 타워에서 조효제 성공회 대 사회과학부 교수님과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전)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을 모시고 인권과 이론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인권 그리고 앰네스티'를 진행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부 회원을 포함한 일반 시민 약 10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앰네스티가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시민사회가 인권에 점점 관심을 갖고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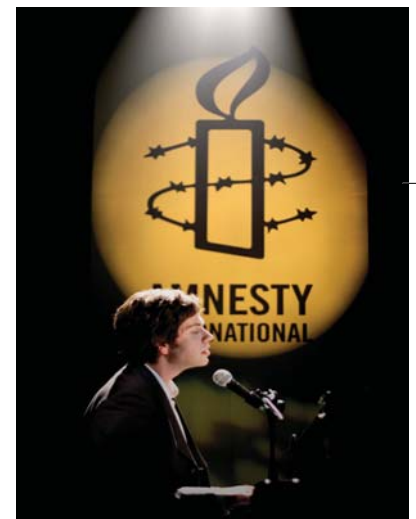
11월에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당신이 할 수 있는 6가지 일들'을 한국지부 회원에게 제안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당신이 누릴 권리, 당신이 지킬 권리'를 테마로 세계인권선언 웹페이지를 오픈하여 앰네스티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실현하자는 의미에서 세계시민여권을 발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웹페이지 (www.amnesty.or.kr/UDHR)에 방문하여 세계시민여권을 다운 받아 60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행에 동참하셨습니다.

12월 6일 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된 편지쓰기 마라톤은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되는 전 세계적 탄원편지쓰기 캠페인입니다. 앰네스티 회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의 정의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편지쓰기 마라톤에 참여해주셨습니다. 2008 편지쓰기 마라톤 대회는 끝났지만, 개별 사례들에 대한 캠페인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지쓰기 마라톤 웹페이지 (www.amnesty.or.kr/2008letter)를 방문하시면 지금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대중광고를 시행했습니다. 60년 전 세계지도자들이 모여 인류를 위해 한 약속이 2008년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메시지 '60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약속, 당신이 지켜주세요'와 구겨진 세계인권선언문 이미지로 서울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전동차 내부에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한달 동안 대중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세계인권선언문과 국제앰네스티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앰네스티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대중매체가 확보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행사는 'Small Places Tour 2008'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70년대 'Secret Policeman's Balls'에서부터, 1980년대 'Human Rights Now Tour', 그리고 2007년 'Make Some Noise/Instant Karma' 앨범까지, 창의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평화를 염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수 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U2, Green Day, Gwen Stefani, Black Eyed Peas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인들과 함께 전세계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2008년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Small Places Tour 2008'라는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전 세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지부는 Small Places Tour에 세계적인 아티스트, 스티브 바라캇(Steve Barakatt)을 초청하여 피아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12월 9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약 1,000여명의 한국지부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같이 축하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공연은 세계인권선언의 4가지 테마 '제 2차 세계대전', '세계인권선언', '지켜지지 않은 약속', '작은 행동이 만드는 세상의 큰 변화'로 구성되어 관객들에게 60주년의 의미를 투영시켰으며, 바라캇은 연주곡 외에도 인류의 희망을 담은 'Imagine'과 'We Are the World' 등의 곡을 자신의 목소리에 담아 선보여 아티스트 개인의 인권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노 개런티로 이번 공연을 참여한 바라캇은 한국지부에 'The Beating of a Butterfly's Wing'이라는 곡을 헌정하기도 한 열정적인 인권수호자입니다.



2008년 12월 9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콘서트에 참가한 스티브 바라캇이 연주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인권강의 중인 라지브 나라얀 © Amnesty International

Campaigns

주요 캠페인

사형제도 폐지

2008년은 세계가 사형제도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해였습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 63차 유엔총회에도 전세계적 사형집행의 중단을 촉구하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2008년 한 해 동안 두 개의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형 폐지했으며, 두 개의 국가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

Campaigns

주요캠페인



동아리 학생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회원이 사형에 반대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던 뒤로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었으며, 2007년 12월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범죄의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사형집행에 대한 요구가 거세어졌고, 정부와 여당이 사형집행을 재개할 것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우회적으로 대통령에게 집행요구를 하는 등의 위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1개의 사형제도특별법안이 발의되어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의 대한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활동하는 종교단체들과 인권단체들과 함께 목소리를 높여 대한민국이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들어설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11월에는 직접 국회를 방문해 이정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과 면담을 하고 1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사형제도폐지에 관한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2008년 10월10일, 여섯 번째 사형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각 종단과 인권단체 등 사형제도의 폐지를 염원하는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생명의 길, 우리의 길'이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기념 행사에는 각 정당을 대표한 의원들이 참석해 한국 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날 국제앰네스티 동아리 학생들은 하얀 가면을 쓰고 사형수를 상징하는 밧줄을 가위로 끊어내는 장면을 연출하며 사형제도 폐지의 염원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11월 20일,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한국정부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기권표를 행사해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2009년 1월, 연쇄살인용의자인 강모씨의 검거에 부쳐 각종미디어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한국지부는 이에 관련한 방송 토론회, 인터뷰 등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2월 들어 한국 내에서 사형 집행 재개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 사무총장은 2009년 2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집행을 재개하지 않고,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사형제도폐지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2009년에도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도 완전히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난민과 이주노동자

2008년에 들어서면서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위협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관심도 계속되었습니다.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난민

한국의 시민들에게 아직까지 한국에 살고 있는 난민의 존재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난민들은 자신들의 조국의 전쟁이나 박해, 자연재해 또는 빈곤 등의 공포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08년 6월 20일,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을 기념하여 '난민과 어울림, 그 하나되는 날'이라는 주제로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유스클럽과 연대하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951년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총 76건입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한국사회에서 무관심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들이 난민이 되었든 우리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그들의 지위를 보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사회적 위상에 걸 맞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

2008년 5월에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의 주요 간부 두 명이 표적 단속되어 강제 출국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주노조의 설립허가를 노동부가 취하한 것에 대해서 이주노조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지만 노동부는 이에 불복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것과 이주노동자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1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같은 시기 있었던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동단속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날의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부상과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또한 계속 위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이 11월 방한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이코 조사관은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정부부처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질의과정을 거치며 조사를 마쳤습니다. 관련한 보고서는 2009년 7월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고향을 떠난 이주자들은 인간으로 존중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 법개정과 협약의 가입 등의 제도적 변화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계속할 것입니다.



덕수궁 앞에서의 난민의 날 퍼포먼스
© Amnesty International



난민의 날 행사에 참가한 난민
© Amnesty International



마석가구단지에서 발생한 출입국관리의 불시단속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잔혹하고 굴욕적인 처우가 있었던 것에 항의하는 시위 © Amnesty International

표현의 자유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그 주제가 다양한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면서 점차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시위자들이 마주하게 된 것은 정부측 관계자들이 아니라 경찰의 방패와 곤봉이었습니다. 또한, 연이은 언론인들에 대한 체포·구속 사태, 인권활동가들과 여러 시민 사회 단체들의 집회에 대한 불법화,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기소 등,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표현·집회·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시작되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는 세계인권선언 20조에 명시된 권리가 위협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였던 일반시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대응방식으로 점차 분노하였고, 경찰의 진압방식마저 폭력적인 양상으로 바뀌면서 집회현장에는 시위대와 경찰간의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결국, 5월의 마지막 날 촛불시위현장에서 경찰은 하룻밤 사이에 227명을 연행하고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이 집회와 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 심각한 침해가 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사례를 취합하고 조사를 진행하 긴급하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런던의 국제사무국에 대한민국의 벌여지고 있는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했으며 관련된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각국의 국제앰네스티 지부들은 대한민국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으로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는 수천 통에 달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한국 내 인권침해 주장과 의혹이 점차적으로 늘어가자 한국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무국 차원의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동아시아 조사관의 파견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4일부터 약 2주 동안 무이코 조사관은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이코 조사관이 촛불집회 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은 7월 7일부터 열흘간 광화문 사거리에서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총 11명의 한국지부 회원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며 밝혀낸 사실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였으며,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상장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하여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혔고, 일부 구급자들에게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이코 조사관은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행한 경찰관의 책임을 물어서 법의 지배에 대한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고 기소된 시위들에게도 적절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월, 국제앰네스티는 촛불집회와 관련된 인권침해 보고서를 ‘Policing the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



무이코 조사관이 촛불시위를 지켜보고 있다.
© 한겨레 21



무이코 조사관이 기자회견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국가보안법 집회에서 발언중인 고은테 이사장
© Amnesty International

주간의 조사관 파견 기간을 포함, 2008년 5월 25일부터 7월 18일까지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력 집행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위해 일반 수감자,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응급의료봉사단, 기자, 변호사 등 시위에 참가했거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56명의 시민들을 면담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2008년 초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압 과정에서 일부 경우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지만 앰네스티의 권고내용들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월, 용산상업지구 농성장에서 경찰은 과도한 경찰력을 사용하여 농성 25시간 만에 6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용산참사는 경찰력 집행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런 한국사회의 계속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간 한국에서는 언론인들을 탄압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009년 3월에는 YTN 노조위원장 노종면씨가 자신과 동료들과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고 후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노종면 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면서 한국정부의 이 같은 언론인에 대한 탄압이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 언론의 자율성과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가보안법

2008년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0주년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근본적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반국가행위와 간첩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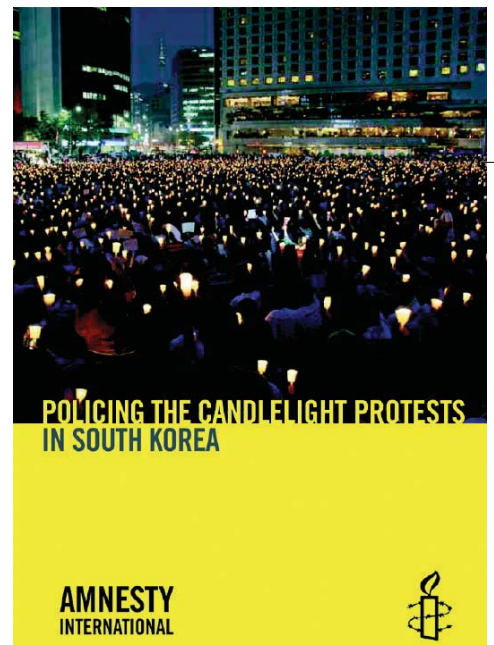
한편 같은 달 30일,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양심수 사진작가 이시우씨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안보와 인권은 결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시우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시작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전면적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어 한국이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응답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표현의 자유로 인해 구금된 이들을 위한 캠페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활동을 진행할 것이며,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한국지부 회원이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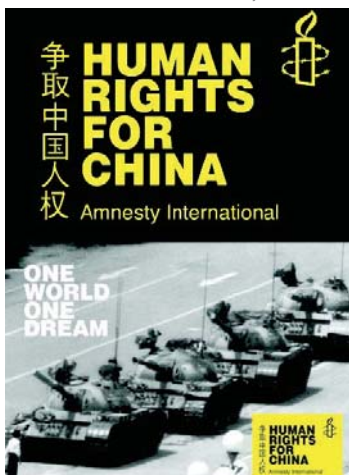
촛불집회 보고서



성대하게 치러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 AP PA Photo Andy Wong



청계천을 지나가던 시민이 중국인권을 위한 도장찍기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중국탄원엽서



올림픽 공원에서 한국지부 회원들이 연출한 Aerial Art
© Amnesty International B. W. Hwang

베이징 올림픽 캠페인

2008년 여름, 성대하게 치러졌던 베이징올림픽을 맞아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전세계적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이 올림픽의 유산으로 인권상황의 개선을 이뤄낼 것을 촉구했던 이번 베이징올림픽캠페인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습니다. 한국지부도 탄원활동과 도장찍기 캠페인, Aerial Art 등의 캠페인에 참여해 중국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각 지부에서 2008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지구촌 시민들에게 중국의 인권상황을 알리고 중국인권개선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지부는 '중국 인권을 위해 서명합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탄원엽서쓰기와 서명을 받는 캠페인을 시작하여 시민들이 작성한 약 1,217개의 엽서와 서명을 주한 중국대사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4월에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비인권적, 비인도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티베트 평화시위 도중 체포된 티베트 승려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개최하였습니다.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중국인권 향상을 소망하는 도장찍기' 캠페인은 위에 중국인권의 유산이 확립되기를 기원하는 도장을 베이징 올림픽 배너 위에 찍는 행사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중국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7월에는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참여하여, Aerial Art(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특정한 글자나, 그림, 기호를 표현하는 것)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이 캠페인에, 한국지부에서는 회원들과 일반시민이 서울 올림픽공원에 모여 한자로 인권을 뜻하는 '人权'을 만들어 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통해 자국의 인권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올림픽을 통해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처음의 약속과 달리 자국의 경제와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충력을 기울였고, 올림픽은 베이징을 정화하는 수단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이 올림픽을 치른 개최국으로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인권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중국정부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인권은 어떤 국가나 이념, 사회의 체제와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단 중국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우리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간섭'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타캠페인

무기거래통제 캠페인

2003년부터 옥스팜(Oxfam)과 국제소형무기행동네트워크(IANSA)와 함께한 시작된 국제앰네스티의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은 2008년 12월 24일, 유엔총회에서 무기거래 조약 수립에 관한 결의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10월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에 국제로비단을 파견하였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캠페인 담당자도 합류하여 이번 성과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비스트들은 각국 정부 대표단과 접촉하고 면담을 요청하여 NGO의 요구사항이 결의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자국의 실리에 따라 손익계산이 냉혹하게 이루어지는 외교의 무대에서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의 로비단은 '인권'이 가지는 힘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자지구 캠페인

2008년 12월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공격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300여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사망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난해왔으며 불법적인 공격행위의 중단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09년 1월 13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열린 가자지구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에 한국지부는 약 50여명의 한국지부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갖고 침묵시위를 하였습니다. 2009년 1월 18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휴전으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은 종료되었지만, 가자에서의 참상은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범죄는 처벌받지 않은 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도 철저하고 공정한 유엔의 조사를 통해 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가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공격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금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2009년 들어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권위 직제개편안에 따라 인권위는 많은 기능이 축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인권위 축소 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앞으로도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조사를 거쳐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2009년 1월 13일 가자지구 국제행동에 날에 참여한 한국지부 회원들 © Amnesty International



© 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 회원이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2008년 10월 20일 국제앰네스티와 무기거래통제 캠페인은 유엔 총회 제 1위원회 의장인 온두라스 대사에게 국회 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책을 전달했다. © Amnesty International

Media Work

미디어 활동



2008년은 역사적으로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언론에서 가장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았던 한 해입니다. 5월에는 전세계에서 동시에 발표되는 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2월에는 11회째를 맞는 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을 열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국제앰네스티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8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국지부 고은태 이사장과 김희진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1962년 이래로 매년 전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발간하는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가 2008년 5월 28일 전세계에 동시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지부도 국내외 미디어를 대상으로 2008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이 내용은 주요 방송사 및 일간지에 보도되며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년에는 60년 전 세계지도자들이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과 지금이라도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한 주제의 연례보고서는 150개국의 인권관련 이슈와 상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11회 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자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무총장 아이린 칸(Irene Khan)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각 국 정부는 60년 전 세계인권선언을 할 때와 같은 비전과 용기 그리고 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정의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향한 요구는 점차 강력해 지고 있고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고은태 이사장은 최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침해소지가 있으며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밝혀 많은 기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1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일에 ‘제 11회 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제 11회 언론상에는 역대 가장 많은 출품작이 공모되었으며, 총 4작품이 언론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동아투위(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가 특별상에 선정되어 많은 언론인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언론상에서는 세계일보 탐사 보도팀이 지난해 이어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SBS 조옥희 PD의 경우 개인적으로 제9회 언론상수상에 이어 2번째 수상의 영광을 잡았습니다.

제 11회 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작		
수상 부문	수상작	수상자
언론상	KBS 시사기획 씬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	정재용, 김준우 기자
	SBS 스페셜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	조욱희 PD
	세계일보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	탐사보도팀
	한겨레 21 '인권 OTL'	인권OTL팀
특별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아투위

시사기획 씬이 제작 방영한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는 그간 쉬쉬하면서 지나가던 스포츠계의 인권유린을 폭로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이 보도를 기폭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계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는데 기여한 점과 특히 피해 당사자의 신원보호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문제의 본질을 잘 들춰낸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SBS 스페셜의 '용서-그 먼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는 피해자들이 어떻게 용서의 길을 택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사회악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가족들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준 작품성이 뛰어난 시사프로그램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 취재팀이 기획 보도한 '정신장애인 인권 리포트'는 기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야인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취재와 더불어 대안을 함께 보도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권문제와 연결시켜 만든 한겨레 21의 '인권 OTL(좌절한 사람을 형상화한 이모티콘)'이라는 독특한 주간 시리즈를 통해 우리사회 인권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심도 있게 보도하여 앰네스티 언론상 수상의 영광을 잡았습니다. 특별상으로는 1974년 유신헌법에 저항하며 시작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사회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상징적인 활동과 역할을 기리기 위해 동아투위가 선정되었습니다.

언론은 국제앰네스티가 인권활동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창립자인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 변호사의 말처럼, 오늘날에도 여론의 압력은 국제앰네스티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내는 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마지막 양심수가 풀려나고, 마지막 고문실이 폐쇄되고, 유엔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권이 실재한다고 선언하는 순간-이 달성되는 순간 우리의 일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SBS 스페셜의 '용서, 그 먼 길 끝에 당신이 있습니까?'를 영화화한 작품



인권 OTL의 기획연재로 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한 '한겨레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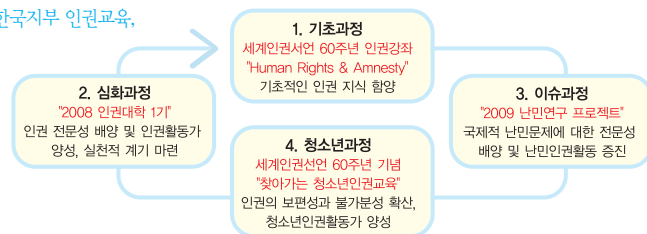
Education 인권교육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사회 시민들이 변화하는 인권개념과 담론을 이해하고, 인권지식을 함양하여 인권실천 능력을 갖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이하여 단계별 전략(기초과정, 심화과정, 이슈과정, 청소년과정) 하에 회원, 청소년, 인권활동가, 시민이 함께 '세계인권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 안목, 명확한 단기목표, 구체적 실행력을 갖춘 심화과정의 인권교육을 실행하여 보다 많은 회원 및 시민들이 인권활동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시민사회대학 인권평화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인권대학(Human Rights College)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인 2008년 인권대학 1기는 9월부터 10주 동안 <인권의 이론> <인권의 실제> <특강: 인문학과 인권>이라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총 65명의 회원 및 수강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고등학교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대상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이해하고, 글로벌 인권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적 동기를 마련하였으며, 실질적인 인권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교육, 한 눈에 보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다양한 이슈를 개괄적으로 다루는 인권대학과 방문인권교육에 이어 특정이슈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09년 1월부터 8주간 진행된 2009 난민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난민'이라는 특정이슈에 대한 교육을 실행함으로써 난민이슈에 관심 있는 회원과 시민들을 조직하고, 이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통해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미얀마 국경 지역에 위치한 난민캠프와 난민관련 NGO방문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난민문제를 접하고, 난민을 위한 인권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은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인권을 알리고 교육시키는 데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09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참여 바랍니다.



인권대학에 참여한 수강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
© Amnesty International



인권대학에서 강의중인 조효제 교수님
© Amnesty International



방문인권교육 © Amnesty International

Activism 회원활동

회원은 국제앰네스티 활동의 중심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08년 회원활동강화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회원 활동조직을 다양화 시키고, 청소년의 참여를 도모하는 등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룹, 네트워크 활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새로운 형태의 이슈별, 활동별 회원조직 결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실행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활동에 대한 관심이 큰 대학생 회원들과 대학생 회원 조직화 전략 논의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대학생 회원들의 주도로 새로운 형태의 그룹(예비52그룹/대학생회원그룹, 예비53그룹/고려대학교학생그룹)이 결성되었습니다. 또한 난민연구프로젝트를 통해 난민이슈에 관심 있는 회원들이 모여 난민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그룹, 22그룹, 38그룹 연합 온라인 모임도 안정적인 정기모임 운영을 통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룹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48그룹 또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외국인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긴급구명네트워크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긴급구명활동 사례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회원들이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긴급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2008년에는 총 14개 국제앰네스티 동아리가 활동하였습니다. 동아리들은 동아리대표자모임과 세계인권선언 유스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었으며, 찾아가는 청소년인권교육을 통해 국제앰네스티 동아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을 함양하고, 실질적인 국제앰네스티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글로벌 인권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유스 프로젝트 Asia Pacific Youth Project/APYP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국제사무국과 협력하여 제 1회 아시아태평양 유스프로젝트 회의를 2008년 5월, 실행하였습니다. 이 후, 발족된 아시아태평양 유스 네트워크는 2008년 중국인권을 위한 캠페인, 사형폐지 얼굴서명 캠페인, 세계인권선언 DVD 제작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스캠페인을 기획 및 실행하여 아시아태평양 유스들의 글로벌 액션을 실행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회원들과 함께 더욱 효과적인 인권활동을 위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회원조직 의 장기적인 전략과 함께 다양한 활동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Activism 회원활동

회원온라인 커뮤니티

- 4그룹, 22그룹, 38그룹 연합 온라인 모임 : cafe.naver.com/amnesty2238.cafe
- 대학생 그룹 : club.cyworld.com/amnestyact
- 난민연구프로젝트 : club.cyworld.com/refugeeseminar
- 48그룹(외국인그룹) : amnesty48.wordpress.com
- 앰네스티 동아리 모임 : youthamnesty.cyworld.com
- 아시아태평양유스모임 : www.apyouth.net



아시아태평양 유스회의에 참여한 앰네스티 회원들
© Amnesty International



앰네스티 대학생 그룹 © Kim Sung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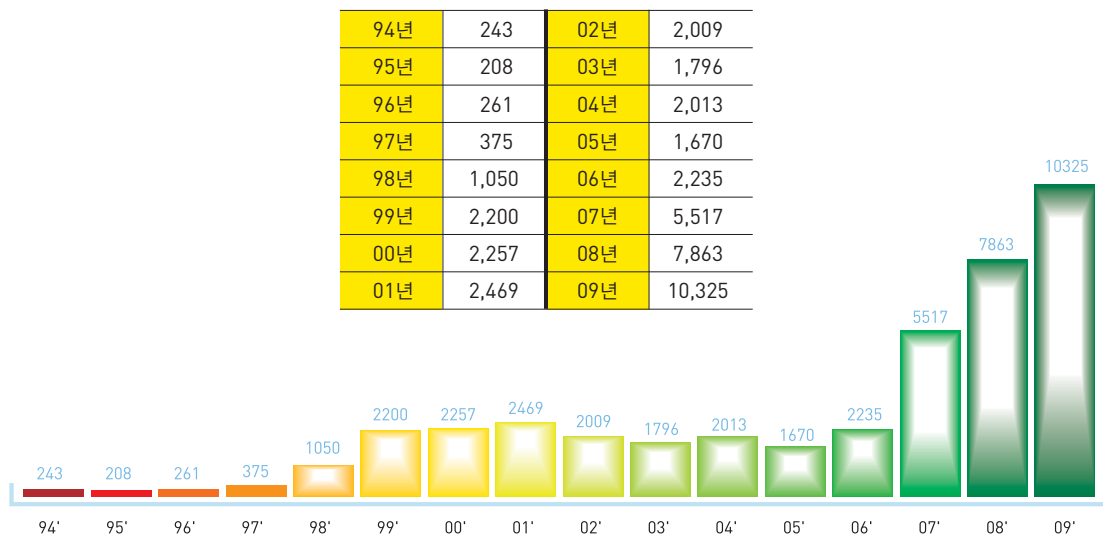
Growth 회원성장

2008년 12월 3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만 회원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전세계의 220만 명의 회원 중에서 1만 명의 회원은 그리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 보이지만, 전세계 회원의 90% 이상이 서유럽과 북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지부의 회원수의 성장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지부의 성장을 통해, 아시아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는 2005년 여름부터 거리로 나가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회원을 모집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5만여 명의 시민들과 인권에 대해서 함께 대화했고, 많은 분들이 흔쾌히 회원이 되어주셨습니다.

회원수의 성장은 재정과 활동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지부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제 회원중심의 인권단체로서 첫 단추를 매웠습니다. 전세계 인구의 50%의 사람들이 아시아에 살고 있지만, 아시아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앰네스티의 활동 또한 미미합니다. 한국지부의 성장이 아시아에서 인권이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인권상황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회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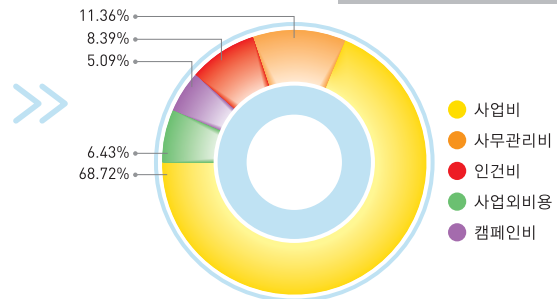
Financial Report 재정보고



기간 2008.04 ~ 2009.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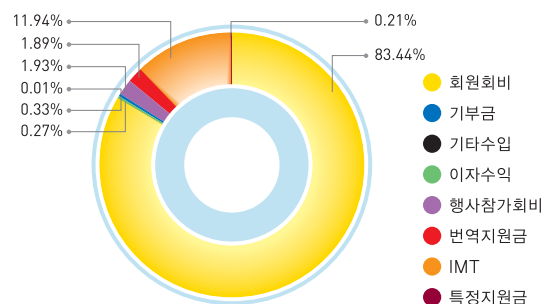
항 목		2008 결산	비율
인건비	관리급여	74,784,453	7.55%
	퇴직급여	8,333,734	0.84%
	합계	83,118,187	8.39%
사무관리비	임대료	36,960,000	3.73%
	관리비(관리, 전기, 수도)	3,173,980	0.32%
	통신비	3,121,430	0.32%
	사무용품/비품	7,808,407	0.79%
	발송비	375,030	0.04%
	복리후생비	27,381,110	2.76%
	지급수수료	27,904,886	2.82%
	교통비	1,131,985	0.11%
	인사관리비	569,350	0.06%
	기타운영비	4,144,750	0.42%
	합계	112,570,928	11.36%
사업비	사업인건비	147,715,370	14.91%
	회의비	12,675,251	1.28%
	교육훈련비	25,403,458	2.56%
	회원관리비	140,646,858	14.20%
	모금행사비	317,173,180	32.02%
	홍보물제작	23,886,160	2.41%
	기타홍보비	13,214,160	1.33%
	합계	680,714,437	68.72%
캠페인비	간급구명활동(UA)	281,620	0.03%
	차이나캠페인비	8,359,333	0.84%
	기타캠페인비	15,513,915	1.57%
	UDHR비	24,837,611	2.51%
	인권교육비	4,462,970	0.45%
	회원활동비	10,251,150	1.03%
	합계	63,706,599	6.43%
사업외비용	감사비	4,655,400	0.47%
	대출이자	29,737,126	3.00%
	국제분담금	16,013,336	1.62%
	합계	50,405,862	5.09%
총지출		990,516,013	100.00%

Financial Report 재정보고



기간 2008.04 ~ 2009.03

항목			2008 결산	비율
지부수입	회비	회원회비	843,741,137	83.44%
	기부	기부금	3,316,535	0.33%
	기타	기타수입	73,185	0.01%
		이자수익	2,703,402	0.27%
		행사참가회비	19,508,246	1.93%
국제기금	기금	번역지원금	19,090,000	1.89%
		IMT	120,710,161	11.94%
		특정지원금	2,084,902	0.21%
총수입			1,011,227,568	100%



국제앰네스티

1976년 노벨평화상, 1977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한 국제앰네스티는 국적, 인종,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비정부기구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입니다. 1961년 자유를 위해 건배한 2명의 포르투갈 학생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에 격분한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 Peter Benenson에 의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약 150여 개 국, 220만 회원, 그리고 수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조사와 캠페인활동을 수행하는 세계최대인권 단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적인 단체이며,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와 협의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에 창설되어 현재 국내 1만 여명의 회원과 함께 양심수석방, 고문방지, 사형제도 폐지, 여성폭력 추방, 무기거래통제, 이주노동자와 난민 보호, 최근에는 빈곤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시도하며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보호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